

냉전 정치와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

정병호(한양대학교)

남한 사회에서 북한 이주민의 정체성은 냉전 정치의 양상에 따라 계속 진화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은 냉전의 ‘영웅’이자 ‘희생자’로서 특별한 지원을 받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빈곤한 적국 출신의 ‘망명자’ 또는 ‘난민’으로서 동정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규정된 수동적 이미지와 달리 그들은 분단체제의 엄중한 경계를 넘어서 사람, 돈, 정보를 주고받는 ‘침투성 초국가 전략’의 적극적 주체이자 행위자이다. 즉 은밀하게 형성된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분단체제의 정치적 장벽을 뚫고 불법적 송금과 연쇄 이주를 일상화한 것이다. 이들의 초국적 이동은 분단국가 간의 정치적 경계만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인권체제의 논리를 이용해서 일단 정착했던 남한을 넘어서 다양한 국가들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냉전 정치의 논리를 간파한 이들의 ‘침투성 초국가주의’가 분단체제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분단국가 내부의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 아울러 검토하였다.

주제어: 북한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초국가주의, 초국가 전략, 침투성 초국가주의, 북한 인권, 국제인권체제, 냉전 정치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 사회과학 연구지원사업(과제번호 NRF-2010-328-B0004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서론

북한 이주민들은 냉전이 끝난 후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남한으로 오기 시작한 한민족 이주민 집단 중에서도 아직 소수에 속한다. 그러나 북한체제에 대한 냉전적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들의 이주 행위는 주로 냉전 정치의 안보적 이해와 북한 정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고,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대응 역시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냉전적 시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북한 이주민의 초국적 이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논리를 분석하고 그러한 움직임의 동기이자 결과로서 나타난 새로운 초국적 연계망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초국적(transnational)’이란,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non-state actors) 사이에 국경을 넘나들며 유지되는 연결망이나 지속되는 교류”를 뜻한다.¹⁾ 기존에 지배적이었던 ‘국제적(international)’이라는 용어가 주로 국가(정부) 간의 공식 협정, 외교, 갈등관계나 국가적 맥락에서만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오기는(관광, 무역 등) 행위들을 의미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지속적 관계와 반복적 운동을 뜻하는 ‘초국적 움직임(transnational mobility)’은 ‘초국적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주체)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이동의 양적인 규모와 무관하게 둘 또는 그 이상의 장소 모두에 깊고 넓은 파장을 미친다고 한다.²⁾

탈북 이주의 ‘초국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발점인 조·중

1) Steven Vertovec, *Transnationalism*(New York: Routledge, 2009), p. 3.

2) *ibid.*, pp. 21 ~ 26 참조.

국경의 ‘경계 넘기(border-crossing)’의 성격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 이주민에 대한 여러 사회의 언론 보도와 학술 논문들은 사회주의 형제국 간의 1,367킬로미터의 자연 하천으로 이루어진 국경선을 냉전의 상징이자 냉전 해체의 현상이었던 베를린 장벽과 비슷한 경계선으로 연상하고 그 선을 넘는 행위가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를 강조해왔다. 이들은 특히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경계 넘기’의 일방향성, 일회적 탈출을 강조하고, 자유를 찾아서 남한까지 가고자 하는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는 실제로 조·중 국경 양편의 내륙 지역까지 연결된 폭넓은 ‘접경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경계 넘기’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간과했다. 또한, 그러한 현상이 주로 중국 조선족 인구의 남한으로의 노동 및 결혼 이주와 연계된 동아시아의 국제적 노동 분업의 정치경제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도 상대적으로 덜 주목했다.³⁾ 또한 중국으로의 ‘경계 넘기’가 ‘잠정적(temporal)’ 이동의 성격이 컸던 것에 비해서, 이들의 남한행은 북한 내의 가족과의 장기적(때로는 영원한) 결별을 각오한 정치적 부담이 큰 선택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큰 초국적 이주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이주민들은 다른 한민족 이주민 집단에 비하

3)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남한으로의 노동 및 결혼 이주와 그에 따른 조선족 사회의 북한 이주민 여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Byung-Ho Chung, “Living Dangerously in Two Worlds: The Risks and Tactic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in China,” *Korea Journal*, Vol. 43, No. 3(2003), pp. 191~211; Hyun Ok Park, “Democracy, History, and Migrant Labor in South Korea: Korean Chinese, North Koreans, and Guest Workers,” *Korean Studies Program Shorenstein APARC*(Stanford University, 2005), pp. 1~41 참조.

여 뚜렷하게 환영받는 집단이다.⁴⁾ 도착과 동시에 바로 시민권을 부여 받고, 정착금과 거주 시설, 정착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시민권은 ‘상황적(circumstantial)’인 것으로 그들이 남한에 입국한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⁵⁾ 냉전적 대립이 강화된 시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영웅’ 또는 ‘희생자’로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출신 국가의 경제력을 중시하는 남한 사회의 위계적 국가 서열 개념에 따라 세계적 빈곤국인 북한 출신 이주민으로서 동정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북한이 정치적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북한 사회의 경제적 빈곤과 기근의 참상이 부각될 때면,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함께 추락하여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⁶⁾

냉전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 탈출은 곧 남한으로의 귀순을 의미하고 최종 목표지인 남한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한 국민으로서 사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이주민들 중 상당수(2013

-
- 4) 재외동포법이 규정한 초국적 국민 개념과 분단국가의 시민권 문제에 대해서는, Chul Woo Lee, “South Korea: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and the State-Nation Nexu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40, No. 2(2010), pp. 230~251 참조.
- 5) In-Jin Yoon, “Circumstantial Citizens: North Korean ‘Migrants’ in South Korea,”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NY: Routledge, 2011), pp. 218~239; 정병호, “탈북 이주민의 환상과 부작용: 남한 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2003).
- 6) 남한 사회의 다른 이주민 커뮤니티의 활성화된 다문화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탈북 이주민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성에 대해서는 정병호·송도영, 『한국의 다문화 공간』(서울: 현암사, 2011); 정병호,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 서울 양천구의 북한 이주민 거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2년도 학술대회 자료집』(한국문화인류학회, 2012) 참조.

년 현재, 약 10%로 추정)는 남한을 떠나서 영국, 캐나다, 미국, 독일, 노르웨이 등 더 부유하고 자유로운 제3국으로 재이주하고 있다.⁷⁾ 그들이 왜 남한 사회를 떠나서 언어적·문화적으로 생소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류학자 아이와 옹(Aihwa Ong, 1999)이 제안한 ‘유연한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 개념이 유용하다. ‘유연한 시민권’이란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조건에 유동적, 기회주의적으로 대응하려는 사람들을 글로벌 무대로 유인하는 자본 축적이나 여행, 이주의 문화적 논리”를 뜻한다.

남한 사회의 ‘위계적 국가관’은 영어권 선진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 특별한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 서열 구조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북한 출신 이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계층 상승을 하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선진 부국으로의 이주와 시민권 획득이다. 그러한 상징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남한의 중산층들이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자본을 투자하여 동원하는 초국적 전략과 비교해서, 북한 이주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을 넘어 온 사람으로서 획득한 ‘초문화적 자본(transcultural capital)’이다. ‘초문화적 자본’이란 국경을 넘어서 이주를 통해 획득한 사회적·문화적 자본으로써 새로운 거주지에서 이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도록 활성화되는 지식, 기술, 네트워크의 전략적 사용을 의미한다.⁸⁾ 즉 초국적 행위에 의해

7) 박명규·김병로·김수암·송영훈·양운철, 『노스 코리아인 디아스포라』(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1); 송영훈,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제주: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2012).

8) Ulrike Hanna Meinhof and Anna Triandafyllidou, “Beyond the Diaspora: Transnational Practices as Transnational Capital,” in Ulrike Hanna Meinhof and Anna Triandafyllidou(eds.), *Transcultural Europe*(NY: Palgrave Macmillan, 2006).

획득된 ‘초국적(사회문화)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제 인권체제의 문화적 논리가 탈북이라는 초국적 행위를 국제적 난민으로서 우선 이주의 자격으로 인정하도록 촉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회와 정보를 먼저 포착한 남한 거주 북한 이주민들 중 일부는 더 부유한 나라로 재이주하려는 계층 상승 전략을 택하게 된다.

북한의 강압적 냉전체제를 넘어온 그들 중 대다수는 남한의 냉전체제도 ‘간파(penetrat)’하여 우회하는 초국적 전략을 구사한다.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 이주민의 대다수(최대 70%가 송금 경험, 그중 상당수는 주기적으로 송금은 북한의 가족들에게 비밀리에 송금을 하고⁹⁾ 밀반입 시킨 중국 휴대전화로 통신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들여보내거나 빼내 오고, 심지어는 DVD나 USB로 남한 드라마를 보내기도 한다. 이들은 남북한 분단체제의 가장 엄중한 냉전적 국가보안법을 양쪽으로 어기면서 바로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발생하는 ‘초문화적 자본’을 기반으로 새로운 ‘초국가적 가족, 공간, 연계망’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으로 갈라진 수백만 이산가족들이 지난 60여 년간 냉전체제와 국가보안법에 순치되어 엄두도 내지 못했던 가족 간의 통신, 송금, 상봉, 재결합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버렸다.

이 연구는 국경과 법 규제와 감시를 뚫고 이루어지는 초국가적 활동을 ‘침투성 초국가주의(penetrant transnationalism)’로 개념화하였다. ‘침투성 또는 침투제(penetrant)’란 방화벽이나 겹질의 견고한 보호막 표면을 약화시키면서 뚫고 들어가 다른 물질이나 사람이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내는 역할을 하는 물질 또는 사람을 뜻한다. 북한과 같이 국경이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그 경계를 뚫고

9) 북한인권자료센터,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6: 취업, 실업, 소득 6』(서울: 북한인권자료센터, 2011), 101~110쪽.

이루어지는 모든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경계 넘기’ 활동은 ‘침투성’ 또는 ‘침투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국가 간 경계가 좁아지고 또 그 벽이 낮아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폭넓게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초국가적 활동과 비교하여 보면 이들의 ‘침투성 초국가’ 활동은 비록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제한된 것이지만 일단 그 막벽이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그것을 뚫고 넘나드는 은밀한 움직임은 심각한 사회적 진동과 파장을 일으킨다.

또한 침투성 초국가주의 활동은 다른 물질과 사람도 내부로 함께 유입시키면서 사회적 ‘변환(transformation)’의 직간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렇게 조그만 구멍들을 뚫어서 선을 만들고 그 선을 이어서 연결망을 만들어나가는 무수한 개인들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으로 인해서, 최근 조·중 접경 지역에서는 다양한 합법적·비합법적인 초국가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활동에 북한 정부와 군대를 비롯한 수많은 관련 기관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도 두드러지게 변화하고 있다.¹⁰⁾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해외 인력송출은 기존의 외화벌이 활동과는 규모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이미 북한 사회 내부에 외부 세계의 풍요가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폐쇄적인 정보 통제보다 일정 수준의 외부 문물의 유입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발전주의국가(developmental state)’ 모델과 유사한 ‘정치성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¹⁾ 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10) 강주원,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서울: 글항아리, 2013).

11) 북한 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폭넓게 소비되고 있는 외부 세계의 드라마, 오락물 등을 통한 정보 유통과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출현하고 있는 서구형 식당과 유원지, 스키장 등 외부 세계의 소비문화를 모방한 다양한 국가적 사업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초국가적 특성에

없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from below)’가 초래한 현실에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from the top)’가 대응한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¹²⁾

냉전의 관점에서 시작한 북한 이주민 연구는 이후 그들의 인권 문제와 아울러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문제에 주목한 연구로 확대되었다.¹³⁾ 또한 남한 사회 정착과 적응 문제, 문화적 이질성과 사회적 통합을 주제로 한 실증적 연구가 다양한 분야의 학제 간 연구로 진행되었다.¹⁴⁾ 근대 한민족 이산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의 이주와 이산의 성격을 ‘diaspora(디아스포라)’ 이론을 통해 규명하는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¹⁵⁾ 최근에는 북한 이주민의 ‘희생자’ 또는 ‘영웅’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주체’ 또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그들의 초국가적 이동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¹⁶⁾ 이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서 정치사적이고 이념적인 의미

대한 논의는 2장 참조

- 12)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와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Michael Peter Smith and Luis Eduardo Guarnizo, *Transnationalism from Below*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98) 참조.
- 13) Woo-young Lee and Yuri Kim, “North Korean Migrants: A Human Security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 Vol. 35(2010), pp. 59~87.
- 14) 정병호·전우택·정진경,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 15) 박명규 외, 『노스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송영훈,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 In-Jin Yoon, “North Korean Diaspora: North Korean Defectors Abroad and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Vol. 30, No. 1(2001), pp. 1~26.
- 16) 이희영,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2권 1호(2012); 이희영,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2013)의 연구는 특히 탈북 여성들의 구술사 분석을 통해 주체적 ‘행위자’로서 이들의 이주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분석보다 사회적 이해관계 분석에 주력하였고, 민족적·국민적 통일 문제보다는 계급 경쟁과 신분 이동 문제에 주목하였다. 북한 이주민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보다 개인과 가족들의 문화적 전략과 전술에 주목함으로써 주어진 상황 조건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거나 실패하는 현실을 알려주는 에피소드보다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나가는 초국적 드라마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국경들을 넘나드는 그들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과 그러한 초국적 이동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국경 넘기’의 정치

북한을 둘러싼 국경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냉전 질서의 상징이다. 세계화의 물결이 거의 모든 국민국가의 국경을 낮추고 약화시키는 동안 북한만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고 통제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주체적(self-reliant)’인 국가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¹⁷⁾ 북한의 국경은 사람의 교류와 접촉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의 물자와 정보도 국가권력의 철저한 통제와 선별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검열 장치이기도 하다. 또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만 막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막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 통제를 위하여 국가권력은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문화

17) 외부 세계와의 접촉 및 교류 통제와 주체적 국가체제 유지 전략의 상징정치 차원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나』(서울: 창비, 2013) 참조.

적, 물리적 강제 수단의 동원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허가 받지 않은 월경 행위는 문자 그대로 ‘탈북’, 즉 ‘탈출’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기근 상황이 장기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계가 덜 엄중한 사회주의 형제국이었던 중국과의 국경을 넘어 갔다. 그중 상당수는 일제 식민체제 속에서 만주 지역이었던 중국 땅으로 이주한 조선족 출신이거나 그들과 가까운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국전쟁 시기에 중국은 조선족 출신의 의용군을 대거 투입하였고, 전후에 그들 중 상당수는 조국에 남았다. 또한 중국의 ‘대약진운동’ 시기의 대기근과 ‘문화혁명’ 시기의 소수민족에 대한 사상 탄압을 피해서 조국으로 돌아온 조선족들이 북한의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중국에 남아 있던 친인척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다시 국경을 넘어 오기도 했다.

폐쇄적 국경 관리를 통한 엄격한 사상 통제를 체제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북한 정권이 식량을 구하기 위한 이들의 월경을 체제 위협으로 여겨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국제적으로 심각한 인권 상황이 초래되었다. 실제로 국제 사회주의 분업 경제의 붕괴와 김일성의 죽음으로 마비된 북한 사회로서는 개혁개방 정책이 정착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와 물질적 풍요가 넘치고 있는 중국 사회를 경험한 구성원들은 체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였다.¹⁸⁾ 이에 더하여, 이미 접경 지역의 조선족 사회에 폭넓게 진출한 남한의 기독교 선교단체, 기업, 관광객과 남한 방송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위성TV 등은 냉전적 분단체제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북한 기근 초기인 1990년대 중반에는 동독 사람들의 대규모 서독 이주로 촉발된

18) Byung-Ho Chung, “Living Dangerously in Two Worlds: The Risks and Tactic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in China,” pp. 191~211.

‘베를린 장벽 붕괴(1989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해서 북한 사람들의 대규모 무단 월경을 북한 체제 붕괴의 조짐으로 여기고, 수많은 외부 ‘종교’ 단체와 ‘인권’ 활동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이탈을 조장하는 데 간여한 것도 사실이다.¹⁹⁾ 오늘날 북한 인권운동의 강한 정치적 성격은 이러한 상황 인식과 활동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1) 남한행 ‘경계 넘기’

북한 당국은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는 ‘배신행위’로 여겼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불법체류자로 이들을 체포하여 송환하면, 조국을 배신한 ‘비겁한 자’들에게 본보기로 다양한 방식의 처벌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하였다.²⁰⁾ 일시적으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적 성격의 북한 사람들도 강제송환 후의 처벌에 대한 일상적인 공포에 시달리며 동아시아 대륙의 여러 나라를 관통하는 이주 루트를 개발하게 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형제국으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지나, 국제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아서 남한까지 올 수 있는 태국까지 이어지는 몇 겹의 국경을 넘어가는 수천 킬로미터의 이른바 ‘서울행 지하철도’의 길은 2000년대 초기에 개척되어 수많은 나라의 외교관, 정보원, 종교

19) Sun-Young Kwak and Yong Wook Lee, “Using Norms Strategically: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Opera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sian Perspective*, Vol. 33, No. 1(2009), pp. 33~74와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운동가로 알려진 노르베르트 폴러첸(Norbert Vollertsen)의 *Wall Street Journal*(Aug. 28, 2003) 기고문과 그와 유사한 주제의 신문 기사와 다큐멘터리 등 참조.

20) Byung-Ho Chung, “Living Dangerously in Two Worlds,” pp. 191~211; Joel Charney, *Act of Betrayal: The Challenge of Protecting North Koreans in China* (Washington DC: Refugees International, 2005) pp. 11~13.

기관, NGO 단체가 간여하고 있고, 거의 기업화된 다국적 브로커 집단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이 되었다.²¹⁾

이렇게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는 다국적 월경 과정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²²⁾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을 불법으로 떠난 ‘탈북 이주민’에게 그러한 자금이 있을 리 없다.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남한 정부로부터 받는 정착 지원금이 원천이다. 종교단체나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남한에 도착한 후 받는 정착 지원금 중 일부를 다음 탈북자들을 위한 후원금 형식으로 그 단체에 다시 갚거나, 중국이나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연쇄 이주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남한 정부의 정착 지원금을 난민이나 망명자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금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남한은 ‘난민 인정률’이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난민 자격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²³⁾ 한민족 이주민 중에서도 중국 조선족이나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의 과거 소비에트연방에 속했던 국가 출신의 동족 이주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조차 제한한다. 오직 북한 출신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서만 지급되는 정착 지원금은 냉전시대로부터 내려온 체제 경쟁 비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사람들은 사회주의의 문제점과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몸으로 증명해주는 증인이기 때문이다. 남한 정부의 지원금은 그들의 체제 선택 행위를 환영하는 뜻도 있지만, 체제 경쟁 상대방의 비난 선전을 의식하여 그들이

21) *Newsweek*, Mar. 5, 2001.

22) 북한에서 한 사람을 서울까지 오게 하는 ‘서울행 열차’ 비용은 약 4,000~1만 달러까지로 상황과 경로에 따라 편차가 크다.

23)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선택한 남한 생활이 시작 단계부터 너무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이기도 하다.

남한 정부는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도착하는 북한 이주민들에게 냉전시대의 정치적 ‘망명자’나 군사적 ‘귀순자’의 영웅적 환영 관습에 따라 정보기관의 심문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적 의례’와 ‘사회적 적응 훈련’을 거치게 한다.²⁴⁾ 지금은 2만 5,000명이 넘는 이 정치적으로 특별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예산은 남북 간에 냉전적 갈등이 고조되었던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서 2012년에는 통일부 예산의 약 58%인 1,230억 원을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배정하였다.²⁵⁾ 냉전적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과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예산을 돌려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한 결과이다. 그러나 통일부의 직접적 지원 예산 이외에 이들의 교육, 직업훈련, 취업, 사회복지 등을 위하여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지출하는 재정과 그 외 민간단체, 종교단체, 기업 등의 지원 비용 등을 더하면, 소수의 북한 이주민 집단에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냉전의 문화 논리로 구성된 이런 고비용 정착 지원 정책이 어떻게 이들의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장기적 적응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된 바 있다.²⁶⁾ 냉전적 정치 상황과 문화 논리는 북한 이주민들의 개인적 적응뿐만 아니라 집단적 정착에도 영향을 미친다.

24) Byung-Ho Chung, “Between Defector and Migrant: Identities and Strategies of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Korean Studies*, Vol. 32, No. 1(2009), pp. 1~27.

25) 『연합뉴스』, 2012년 9월 16일.

26) 정병호, “탈북 이주민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 사회에 거주하는 북한 이주민들 중 상당수는 최근 5~6년 사이에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으로 재이주하였다.²⁷⁾ 이른바 ‘탈남’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특별한 사회적 혜택과 재정 지원을 받으며 남한의 국민으로 정착한 북한 이주민들의 제3국 이주는 ‘탈북’ 행위를 분단체제의 다른 한편인 남한을 선택한 ‘탈출’로만 여겼던 남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분단 정치의 논리로 탈북자들을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예외적으로 처우할 것을 주장해온 남한의 보수적 미디어와 정치 집단은 이들의 재이주를 더 잘사는 나라를 향하는 ‘기회주의적 배신’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냉전적 경쟁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적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기존의 ‘특별한’ 처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기적적 경제성장을 자랑으로 삼는 발전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차원의 자존심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재이주는 치열한 차별적 경쟁 사회인 남한에서 냉전 정치의 대상으로 또 하층민으로 업신여김당하며 살아야 하는 암울한 삶의 조건이 바로 그 배경이다. 남한에서 이들의 삶의 조건과 경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2) 북한행 ‘경계 넘기’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주민들 중 대다수(약 70% 이상)가 북한의 가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냉전적 경쟁 차원의 정착 지원금은 오히려 이들이 도착 직후부터 송금할 수 있는 자금력

27) 송영훈,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 오원환, “탈북 청소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을 갖게 하였다.²⁸⁾ 냉전적 대치 국면에서 적대적인 반대편으로 넘어 온 일종의 ‘배신행위’에 대한 부담감과 아울러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북에 남은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한 ‘죄책감’이 이들을 가족 송금과 연쇄 이주를 위한 루트 개척에 몰두하게 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엄중한 냉전적 경계선을 불법으로 넘어 온 그들이 다시 몇 개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면서 다양한 침투성 초국가 교류의 길을 연 것이다. 이렇게 개척한 보이지 않는 루트를 통해서 그들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물건과 정보를 들여보내고, 중국의 휴대전화까지 보내서 북한의 가족과 직접 통화하기도 하였다. 그 길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빼내오는 연쇄 이주의 고리가 되기도 하였고, 한류 드라마와 노래 등 오락물에서 남한 기독교회가 보내는 한글 성경책까지 유통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국가를 넘어서 가족을 연결하는 이러한 모든 초국가적 활동은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냉전체제를 뒷받침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폐쇄적인 북한 사회를 ‘관통(punctuate)’하는 일로서 남한과 미국 등의 보수적 냉전 세력에 의해 북한체제 전복을 위한 작업으로 은밀하게 조장되기도 하였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가장 경계하고 강력하게 통제해야 할 적대적인 위험한 움직임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일방통행로가 아니었다. 또한 그 길을 통한 움직임이 한 방향으로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었다. 국가권력의 통제를 벗어난 경계를 넘는 움직임은 모두 분단체제 자체에 위협이 된다.

28) (사)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이 2010년 10월 탈북자 3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으로 송금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71.4%이고, 이들 중 66.2%는 ‘정착 지원금’을 송금에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새터민(탈북자) 의식조사·조사결과 요약 및 통계표』 참조.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분단체제 국가권력의 근간이 되어 온 냉전적 경계선의 문화 논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길이 되었다. 실제로 남한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은 북한 이주민들 중 일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하였고, 몇몇은 이미 익숙한 그 길을 통해 북한과 중국 사이를 여러 차례 넘나들다가 남한 국민 자격으로 다시 남한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였다. 조금 길지만 다음에 인용한 사례를 통해 냉전적 분단체제를 넘어서 ‘초국가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을 연결하고 유지하는 불법적 ‘경계 넘기’의 구조와 아울러 ‘침투성 초국가주의’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 이후에도 2차례나 북한을 다녀오고 북측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까지 해온 탈북자가 적발됐다. 남한 생활이 기대보다 궁박한 데다 북에 두고 온 처자식을 생각해 돌아갔던 이 탈북자는 정작 북한에서는 남한에 두고 온 가족이 걱정돼 다시 탈북하는 등 이웃 동네 드나들듯 남북을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북측 당국자들은 거둬진 탈북과 밀입북에 대해 ‘뇌물’을 받고 눈감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6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탈북자 이모(30)씨를 구속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3년 어머니, 누나와 함께 두만강을 넘어 탈북, 중국과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 씨는 사회적응훈련을 거쳐 2004년 2월 정착금 3000만 원에 12평 아파트를 무상 지원받아 정착했다. 이후 이 씨는 서울 관악구 일대 숙박업소 종업원으로 전전했으나 별이가 신통찮았다. 오히려 전사자 집안이라는 좋은 출신 성분 덕분에 살 만했던 북한 생활이 떠올랐다. 기계공이던 그는 19세에 공장을 무단이탈, 함북 회령 등 국경 지대에서 니켈 등 광물이나 중국 공산품을 거래하는 장사꾼으로 변신,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

이 씨는 차라리 북에 두고 온 아내 황모(32) 씨에게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는 2004년 6월 집 근처 공중전화를 이용해 북한의 누나(43)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경 지대에 살던 누나는 탈북한 가족이 전달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누나에게 뇌물을 써서 자신의 북한 여행증명서를 준비하도록 부탁해놓고 같은 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야음을 틈타 15미터 폭의 두만강을 건넌 그는 북측 보위부 관리들에게 북한 돈 6만 원 상당의 담배 4보루, 8만 원 상당의 일제 중고 자전거, 현금 12만 원 등을 제공, 입막음을 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한 이 씨는 남한에 두고 온 어머니와 누나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밀입북 사실이 발각되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다. 그는 국경경비대를 매수, 다시 탈북해 2005년 6월 남한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씨는 6개월 뒤 같은 경로로 다시 밀입북해 아내 황 씨와 아들, 탈북 기간 중 출산한 딸과 상봉,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장사에 나섰지만 2006년 9월 다시 탈북을 결심했다. 이번에는 아들(6)과 이웃 최모(여) 씨를 이끌고 남한에 들어왔다. 이 씨는 자신의 밀입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최 씨와 입을 맞췄으나 최 씨가 정부 조사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다.²⁹⁾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남한에서도 그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넘나든 사람들은 그 사실이 발각되면 분단체제의 국가를 수호하는 냉전적 법제도에 의해 ‘간첩’으로 규정되어 재판에 회부된다. 그들 중 일부는 법적으로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가 밝혀졌지만, 이들의 거둬된

29) 『문화일보』, 2007년 7월 6일.

양방향의 월경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보수적 언론기관에 의해 국가 권력과 체제를 농락한 '의심스러운' 행위로 알려졌다.³⁰⁾ 남한 사회의 물질적 풍요의 우월성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입북은 북한 당국이 가족을 인질로 협박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탈북 이주민의 남한 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남한 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노동 소외, 미래에 대한 절망감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동독 출신 총 300만 명 중 약 10%인 30만 명 정도가 서독에 적응을 못한 나머지 동독 지역으로 되돌아갔다”³¹⁾는 사실은 북한에서의 가혹한 처벌 가능성과 생활수준 격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의 보편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최근 평양의 조선중앙TV는 재입북 탈북자들의 증언을 거듭 방송하고 있다. 남한 언론도 재입북한 사람의 수가 2012년에만 약 100명에 달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³²⁾ 대부분은 북한에서 교사나 기술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써 남한 사회에서 이들이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는 현저하게 낮은 파출부나 간병인, 단순노동 등 불안정한 직종에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고백·참회·용서·사량·감사의 스토리를 기독교 성서의 ‘돌아온 탕자’의 예화와 비슷한 전형적 방식으로 거듭해서 전국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다. 북한판 ‘망명의 정치(politics of defect)’를 시작한 셈이다. 한편 대내적으로, 이제 북한 출신은 같은 민족인 남한에서도 차별받고 업신여김당하며 살게 된다

30) 『매일일보』, 2013년 8월 22일.

31) 『프레시안』, 2013년 4월 25일.

32) 『시사저널』, 2013년 10월 17일.

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미 북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외부 세계의 풍요를 북한 주민들은 실제로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논리는 일제 식민지 상황의 친일 지주와 소작인 관계로 전형화한 예측과 굴종의 역사적 경험과 병렬적으로 결합시켜서 전달한다.³³⁾ 이것은 ‘극장국가 북한’에서 그동안 예술 정치를 통해 내면화시킨 제국주의적 차별과 민족 해방의 논리를 국가적 차별과 국민적 자존의 문제로 논리적으로 연결한 것이다. 즉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통일 조선(한)민족’에서 ‘북조선(한) 국민’으로, 즉 ‘민족’에서 ‘국민’으로, 정체성의 강조점이 이동한 것이다.

2012년, 평양의 내외신 기자 앞에서 회견을 했던 탈북 이주민, 김광호는 가족을 동반하고 심양의 한국 영사관에 나타났다. 재탈북한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그를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할 근거가 없었다. 다시 남한에 온 그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장을 받고 있지만, 남한 정부도 그를 북한의 ‘간첩’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 이주민들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은 이미 분단체제의 양쪽 국가권력의 속성을 간파하고 냉전적 법과 제도의 모순과 자의성을 드러내면서 그 근본 개념을 흔들기 시작하였다

북한 이주민들의 ‘경계 넘기의 정치(Politics of Border-Crossing)’는 남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체제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북한체제와 국경의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과 오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흔히, 북한은 가장 철저한 감시와 처벌체제가 작동하는 사회이고, 그 국경은 냉전시대의 베를린 장벽과 같이 엄중하게 지켜지는 경계선일 것

33)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냉전적 국경 개념과 국가 이미지는 자연 하천과 여울 등으로 이루어진 조·중 국경의 성격과 그 접경 지역에서 깊은 내륙까지 펼쳐진 가족과 친족 연결망이라는 폭넓은 사회지리적 ‘회색지대’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친족 연결망은 실제로 남한과 일본,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등 전 세계의 한인 이주민 커뮤니티까지 연결된 것이다. 또한 북한체제는 물리적인 본보기 처벌과 인적 상호 감시와 고발에 의존하고 있고 권력의 폭력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지만,³⁴⁾ 정보화된 사회의 ‘보이지 않는 권력(invisible power)’ 처럼 지워지지 않는 전자 기록 장치를 갖춘 정밀한 ‘중앙 감시’ 체제는 아니다. 즉 상대적으로 ‘보이는 권력(visible power)’이 가혹하게 물리적 힘을 과시하는 덜 정교한 근대국가 체제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³⁵⁾ 그러나 북한체제에 대한 냉전적 이미지와 국경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오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월경 경험이 있고, 남한에 온 후에도 다시 입북을 하거나, 또 재탈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탈북 논의에서 흔히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월경을 하고 또 거듭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행위가 쉽거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북한이라는 체제가 규정하고 관리하는 그 경계선을 넘는 행위가 수반하는 긴장감과 공포심은 지구상의 어느 국경선을 넘는 행위와도 비교할 수

34) Andrei Lankov, In-Ok Kwak, and Choong-Bin Cho, “The Organizational Life: Daily Surveillance and Daily Resistance in North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2(2012), pp. 193~214.

35)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감시와 처벌』(서울: 나남출판, 2003) 참조. 북한 정권의 감시와 처벌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Andrei Lankov and In-Ok Kwak, “The Decline of the North Korean Surveillance State,” *North Korean Review*, Vol. 7, No. 2(2011), pp. 6~21 참조.

없이 강한 것이다.³⁶⁾ 자신에 대한 물리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자손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계 넘기’를 되풀이하는 이유는 대부분 ‘가족’ 때문이다. 그 경계선 양편의 생활 조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또 자신의 월경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게 될 피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위험 부담을 안고도 가족적 연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이 송금이다. 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보내는 ‘침투성 초국적 송금(penetrant transnational remittances)’은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 사회 내부에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 넘을 수 없는 국경을 넘어서 생긴 그 힘은 역설적으로 그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하는 뇌물이 되기도 하고, 불법적 월경 행위로 나빠진 가족들의 사회 성분과 교육 기회와 사회적 지위를 다시 높일 수 있는 ‘초국적 자본(transnational capital)’이 된다.

탈북 이주민들이 비공식적으로 보내고 있는 초국적 송금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100억 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³⁷⁾ 북에 있는 가족들이 이러한 송금으로 획득하게 된 경제적 힘과 지위는 ‘한라산 줄기’라는 은어로 표현될 정도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의 유격대원의 후손들이 공공연하게 누리는 특권을 지칭하는 ‘백두산 줄기’라는 말을 모방한 것으로, 재일동포 가족들의 송금으로 북송 교포들이 획득한 지위를 뜻하는 ‘후지산 줄기’, 재중 조선족 친척의 송금에 의지한 ‘두만강 줄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6) Soo-Hyun Jang, “Living as Illegal Border-Crossers: Social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Korea Journal* Vol. 43, No. 3(2003), pp. 212~232.

37) 『국민일보』, 2012년 7월 12일.

최근 북한 당국은 절박한 외화 필요 때문에 이 지역의 월경 이주 노동을 제도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³⁸⁾ 정보 통제를 위해 폐쇄적으로 국경을 통제하면서 외부로의 인구 이동을 막아왔던 북한 사회가 본격적으로 ‘초국적 이주 노동(transnational migrant labor)’ 송출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변화는 일견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이미 현실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물자, 정보의 불법적 유통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가 추동한 것이다. 규모나 빈도가 가시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침투성 초국가주의의 영향은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사람, 물자, 정보의 초국적 이동에 비해서 더 깊고 큰 것일 수 있다.

3.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와 ‘상황적 시민권’

휴전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의 정체성은 주로 분단체제의 냉전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입국 시기에 따라 정치적 ‘망명자’, 경제적 ‘난민’, 사회적 ‘이주민’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38) 북한의 군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중국 내 변경 지역의 대규모 합작 공단에 노동자를 파견하거나, 직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건설노동인력과 입주 가정부를 중국과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까지 보내는 초국적 인력송출 사업의 양성화·합법화·제도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북한 인력송출이 가장 활발한 중국 단둥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는 강주원,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참조.

다른 이주민 소수자 집단에 비교해서 탈북자들은 도착 즉시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금과 임대아파트를 배정받는 등 특혜에 가까운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는 정착 초기에 비교적 빠른 생활 기반을 갖추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적인 존재로 길들여지는 치명적인 장기적 적응 문제를 발생시킨다. 일단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종합적인 사회복지 대상자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혜택을 포기해야만 하는 저임금 취업은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욱이 임의로 배정된 임대아파트에 못 박혀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산업시설이나 일자리로 이동하기도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 이주민의 대다수가 남한 거주를 통해 자산을 모으기보다는 3~4년 이내에 정착 지원금 대부분을 다 써버리고서야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정착금 지원 규정 등이 일부 보완되기는 했지만 정착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1)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

북한 이주민들은 정부와 각종 단체의 지원을 통해, 비록 영구 임대아파트이긴 하지만, 일순간에 중산층적 삶의 외형을 갖추고 자본주의적 소비 패턴을 받아들이게 된다. 북한 이주민에게 임대아파트는 도시 중산층의 현대적 생활 방식과 자본주의적 소비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자 동시에 남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낮은 사회적 위치를 가시적으로 알려주고, 최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생활 전략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모순적인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자들의 집단 세력화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

였고, 상당수의 연구자들도 이들이 지리적으로 집중 거주하고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면 남한 사회 내부의 불만 세력으로 성장하리라고 예측하면서 탈북자들의 지방 분산배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타의로 거주지를 지방 도시로 배정받은 탈북자들 중 상당수가 1~2년 이내에 그들의 가장 커다란 사회적 자산인 영구 임대아파트를 비워둔 채 탈북자 거주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모여든다.

북한 이주민들이 1990년대 말부터 임대아파트를 배정받기 시작하여 가장 오래된 집중 거주 지역이 된 서울 양천구는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 재이주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이 이곳에 정착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91%(총 거주자 1,099명 중 1,006명)가 그 대로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남한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자산 형성 방식인 전세나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1%에도 못 미치는 현상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이주민의 남한 사회 초기 생활 기반인 주거 공간은 본인의 노력이 아닌 정부와 단체의 지원으로 한 순간에 얻게 되지만 생활 방식과 소비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대 도시인의 아파트 주거 방식은 모든 자원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고 거주지는 늘 그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이주민은 ‘주어진’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 사회복지, 교회, 정치적 활동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특별한’ 존재인 북한 이주민 커뮤니티는 다양한 민간 단체와 교회 등 종교단체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을 불러들인다. 이러한 지원 단체들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관심,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 이주민과 그 커뮤니티에 대한 시각과 관심, 그리고 사업 내용이 다르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이주민들도 주로 북한에 대한 정보나 지식 등 남한 사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문화적 자본’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적 결사와 사회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그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냉전적 사고 틀 안에서 정치적 소수자로서의 의미를 거듭 재확인하면서 북한 이주민을 대상화하는 시각을 강화하거나 집단적으로 그들을 더욱 주변화하는 부작용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 중 일부는 북한 문화의 특성을 활용해서 연예단, 음식점과 같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모색하지만 주로 생활공간인 주거지 커뮤니티와는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양천구 거주 북한 이주민 총 1,099명 중 임금 근로자는 모두 96명에 불과하다. 이 숫자는 2010년의 69명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지만 이들의 취업률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낮다.³⁹⁾ 그러나 관련 기관이 실시한 ‘북한탈주민의 경제활동 현황 조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임금 근로자 수보다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⁰⁾ 두 수치

39) 비경제 활동 연령층이 많은 북한 이주민 거주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이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이 집단의 임금 근로자 비율은 다른 남한 주민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4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활동 상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2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510명(42.5%), 비경제경제활동 인구는 690명(57.5%)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2.5%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510명 중 ‘취업자’는 465명(91.2%)이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일부의 연구 위탁을 받아 실시한 조사에서는 만 15~64세의 북한이탈주민 중 291명(48.6%)이 경제활동인구이며, 308명(51.4%)이 비경제활동인구이고 경제활동인구 291명 중 취업자는 251명(86.3%)로 조사됐다(통일부, 2009).

를 비교해보면, 실제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 이주민의 상당수가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체 차원의 복지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과 민간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까지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보여준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가장 오래된 북한 이주민 집단 중에 자영업자가 단 3명으로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원인을 흔히 사회주의 국가 출신 이주자들의 시장경제체제 경험 부족과 자본 부족을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중국 조선족과 사할린 귀환동포 등 다른 과거 사회주의권 출신 이주민 집단이 자영업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문화적 자산을 경제화 시키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면 북한 이주민의 경우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는 초기 정착 과정에서 정착 지원금과 임대 아파트를 주는 등 특별한 사회복지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생활보호 대상으로 안주하게 만든 때문이기도 하고, 교회 등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시혜적 지원 프로그램도 그들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세우기보다는 복지나 자선의 대상으로 길들이는데 일조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이주민은 다른 이주민들과 달리 밀집 주거 지역 내에서 이주민 커뮤니티의 특징적 모습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하는 지역은 이주민들 스스로 익숙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사회단체와 종교기관 및 다양한 상권을 형성하면서 커뮤니티 공간도 바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이주민 소수자 집단은 주류 사회의 차별에 대응하거나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양천구와 인접해 있는 구로구와 영등포구에서 번창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타운’이 그 대표적인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천구 내 북한 이주민들은 10여 년 이상 임대아파트 단지에 수백 명 단위로, 모두 1,000여 명이 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 이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양천구의 아파트단지 안에서 북한 이주민들의 공식적인 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곳의 임대아파트에서 오래 살고 있는 남한 주민들은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북한 이주민 몇 명을 제외하면 초기에 비해 요즘은 조용한 편이라고 한다. 북한 이주민이 단지 내에서 남한 주민과 갈등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이 일면 남한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들로 북한 이주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측면이 강하다.

북한 이주민들이 거주 지역과 학교, 직장 등에서 남한 사람들에게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현상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일이다.⁴¹⁾ 그들이 남한 사람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남한 사회에서 일반적인 북한 사회에 대한 경멸적 고정관념과 편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더욱 두드러진 이유라고 한다. 냉전적 담론에서 탈북자들은 북한체제의 대표적 희생자이자 그 체제에 맞선 영웅으로 존중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북한 사회에 대한 모든 부정적 이미지도 함께 짊어진 살아 있

41) 남한 학교에 다니는 탈북 아동과 청소년의 70% 이상은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드러내지 않고, 탈북 성인들의 경우도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출신 지역을 감춘다. 정병호·전우택·정진경,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에 수록된 다양한 연령집단의 남한 사회 적응양식에 대한 학제 간 연구 결과 참조.

는 문화적 표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남한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 이주민들을 동정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천 아파트 북한 이주민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다. 몇 년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북한 이주민들이 적지 않다. 하나원, 고향 친구, 입국 과정, 단체 활동 등 단지를 벗어나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면 단지 내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2년간 참여관찰연구를 진행한 양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모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같은 단지 내에서 5년을 넘게 살면서,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대략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부모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처럼 지내는 것이다. 즉 거주 지역 내의 북한 이주민의 관계 역시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냉전적 담론의 강화는 북한 이주민들 간의 경계 의식과 위기감도 함께 증폭시키고 있다. 같은 고향 사람들을 반기기보다는 서로 간에 의심과 경계를 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탈북 사실이 출신 지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서로 불편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남북대화 시기보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2009년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고 한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새터민’이라는 용어까지 만들면서 북한 이주민의 이미지를 탈정치화 시키고자 했던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특별한’ 정치적 존재로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 주거 지역 안에서 이들 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소원해지고, 드러나지 않게 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탈북’이라는 행위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부각되고 도구화될수록 커뮤니티 생활공간에서 그들의 존재는 더욱 잠재화되

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이주민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수자로서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불편함 때문이다. 분단 정치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냉전적 담론이 탈북자를 영웅시하거나 희생자 이미지를 부각시킬수록 지역 커뮤니티 차원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들에 대한 동정심과 경계심이 강화되면서 이 집단 전체를 대상화하는 고정 관념은 강화되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수자 커뮤니티의 주변성은 북한 이주민들의 범주와 정체성을 둘러싼 남한 사회 내부의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시선과 작업,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이주민들의 정체성의 정치 전략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지고 또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위계적 국가관과 ‘상황적 시민권’

남한 사회의 북한 이주민의 지위와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경섭이 소개한 ‘상황적 시민권(circumstantial citizenship)’⁴²⁾ 개념이 유용하다. 상황적 시민권은 보편적 평등원리나 같은 민족 또는 국민이라는 문화적 변수보다 변화하는 정치적·경제적 변수에 의해 상황적으로 결정되는 시민권을 뜻한다. 그들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모든 주민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분단체제의 법적 논리에 기반 한 헌법 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획득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상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지배적

42) Kyung-Sup Chang, “Introduction: South Korea’s Condensed Transition from Class Politics to Citizenship Politics,” *Citizenship Studies*, Vol. 16, No. 1(2012), pp. 1~12.

인 정치외교 상황에 따라 그들의 법적 시민권은 결정된다. 특히, 그들이 중국이나 북한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 영역에 체류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이중국적의 유효성 여부는 그들의 난민 지위 결정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⁴³⁾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는 그들을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의 완전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이와 옴은 ‘문화적 시민권(cultural citizenship)’⁴⁴⁾이라는 개념으로 법적 시민권이 있어도 온전한 시민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주민, 소수자들의 문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실제로, 그들은 정치적으로 가치가 있을 때는 환영받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여겨질 때는 시민적 지위와 권리가 낮아졌다. “이렇게 변화하는 지위와 사회적 관념은 그들의 (남한)사회 적응 수준과 그들의 자아 개념과 정체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Yoon, 2011: 220).”⁴⁵⁾

한민족 귀환 이주민에 대한 남한 정부의 차별적 이주 및 노동 정책에 주목하여, 설동훈과 스크렌트니(Seol and Skrentny, 2009)는 남한의 ‘위계적 국민성(hierarchical nationhood)’ 관념은 경제적 이해와 결합된 다른 (더 강력한) 국가의 지정학적 목적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혈연에 기반을 둔 국민적 소속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적 이해와 지정학적 목적이 혈연적 결속을

43) Patricia Goedde, “Determining Refugee Status for North Korean Escapees und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1, No. 2(2011), pp. 143~160.

44) Aihwa Ong,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Making: Immigrants Negotiate Racial and Cultural Boundaries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Anthropology*, Vol. 37, No. 5(1996), pp. 737~762.

45) In-Jin Yoon, “Circumstantial Citizens,” p. 220.

묻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북한 주민은 남한의 법적 국민이라고 정의한 분단체제의 헌법적 시민권도 그와 비슷한 문화적 논리의 도전을 받게 된 상황이다.

(남)한국의 위계적 국민성에 대한 주요한 도전은 늘어나고 있는 북한 난민의 유입일 것이다. 이 집단은 중국 조선족이나 재미동포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남한이란 국가를 심각하게 시험할 것이다. 한국은 이민정책을 만들면서 같은 국민(민족)성과 경제적 효용이란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남한 사회는 북한 주민이라는 혈연적으로 온전한 한민족이면서 헌법적으로도 한국이란 국가 구성원으로서 완전히 평등하지만, 남한의 고도로 경쟁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이주 제한된 인구집단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남한은 북한 주민을 화려하게 환영하는 것에서 억제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다.⁴⁶⁾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북한 이주민들은 ‘2등 시민’이 된다. 더욱이, 각 나라의 경제 수준에 따라 그 국민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위계적 국민성’ 개념에 의해서 세계적 빈곤국인 북한은 가장 낮은 위치로 평가되고, 따라서 그곳 출신들도 비슷한 위치가 된다. 그래서 남한 학교로 진학한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남한 사람으로 ‘넘어(passing)’ 가고자 애쓰지만, 북한 지방 사투리 억양이나 다른 문화적 특징 때문에 어려울 때면 차라리 그보다는 상대적

46) Dong-Hoon Seol and John D. Skrentny,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Vol. 9, No. 2(2009), p. 166.

으로 나온 위치인 중국 조선족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4. 냉전의 정치와 ‘유연한 시민권’

1) 국제적 인권체제와 냉전의 정치

미국에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은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허용과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를 고발하고, 탈북자를 지원하는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탈북자 지원 정책을 계기로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서구 각국에서도 이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을 난민으로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북한 이주민들의 이동은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냉전 시대부터 미국은 보편적 인권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대응하였고, 이를 정치적으로 중요한 외교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⁴⁷⁾ 『북한인권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은 부시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던 상황에서, 이미 진행되기 시작한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북을 보호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치적 필요성을 배경으로 제정된 것이다.⁴⁸⁾

47) 권현익,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서울: 민음사, 2013).

48)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심양 사건의 주인공인 탈북자 가족과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위로하였다. 그 외에도 강철환 등 탈북자들을 따

그러나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상하양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직접적 계기는 초국가적 인권단체들이 북한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사회여론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초국가적 인권단체들은 탈북자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을 유도하려고 중국에 있는 외국공관에 연속적으로 탈북자를 진입시키는 이른바 ‘기획망명’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까지 북한과 탈북자 인권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원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였다고 한다.⁴⁹⁾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포함된 연 2천만 불에 달하는 북한의 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국제적 인권체제와 냉전적 권력정치의 밀접한 관련성은 더욱 자명해진다.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의 약 70% 이상은 북한 내부에 외부정보를 유입시킴으로써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민주화를 확산시킨다는 목적으로 북한 관련 라디오 방송,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언론매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⁵⁰⁾ 즉 북한 주민이나 북한 이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로 만나서, 북한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White House, April 28, 2006).

49) 초국가적 인권단체들은 탈북자를 2001년 중국 베이징의 UNHCR 사무실에 진입시켜 중국 정부의 견제를 뚫고 한국행을 성사시킨 사건을 시작으로, 중국 내의 여러 국가의 외교 시설에 다양한 형태로 진입을 시도하여 중국 내 탈북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알렸고, 특히 2002년에는 중국 심양의 일본 영사관에 진입하던 탈북 여성과 아동을 중국 공안이 폭력적으로 체포하는 광경을 세계적 언론기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함으로써 탈북자 인권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였다. Sun-Young Kwak and Yong Wook Lee, “Using Norms Strategically,” pp. 33~74 참조.

50)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서 책정한 예산을 ‘민주화지원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을 통해서 어떤 단체와 활동에 얼마나 지원하였는지는,

인도 지원을 통한 인권증진보다는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 고발과 북한 주민의 탈출유도 등을 통해 북한과 중국 정부에 대한 견제와 북한 체제 붕괴까지도 목표로 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미국 내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등을 통해 북한과 탈북자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국제적 컨퍼런스를 지원하여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탈북자들의 망명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정책 변화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제기하고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인권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미국 정부 스스로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상당히 까다로운 원칙을 적용해서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받아들인 탈북자가 적은 편이다.⁵¹⁾

원래 미국은 남한 헌법의 국민 규정을 존중하여 탈북자는 우선적으로 남한에 귀속되도록 하고, 남한 국민이 된 사람들은 미국 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단 미국의 망명 허용 정책이 알려지자 제3국과 남한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이 영주권 획득 가능성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미국 등 서구 선진국 이주를 추진하였다. 먼저 태국과 제3국에서 남한행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서 미국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고, 이미 남한으로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일단 미국으로 밀입국을 해서 망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남한에서도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거나, 신변이 위협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재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타났다.⁵²⁾

NED 홈페이지(<http://www.ned.org>) 참조.

51) 국가별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 현황은, UNHCR Online Population Database 참조.

남한 정부의 정착 지원금과 주택, 교육 등 각종 혜택을 받은 북한 이주민 중에서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그들의 일견 터무니없어 보이는 정치적 탄압과 신변위협 주장이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남한 정부와 남한 사회는 당황하였다. 남북화해와 협력 정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당시의 진보적 남한정권은 미국과 남한 보수 세력의 정치적 견제 때문인 것으로 여겼고, 보수적 남한 언론기관은 진보정권의 탈북자 푸대접과 북한의 위협 상황을 그 원인으로 돌렸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남북 간의 냉전적 갈등 분위기 속에서 남한의 보수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북한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하였고, 보수적 언론기관들도 이들을 미디어 영웅으로 부각시켰지만 이른바 ‘탈남’ 현상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들 중 대다수는 남한 사회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고, 더 어렸을 때 들어와서 남한의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⁵³⁾ ‘탈북’은 더 이상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민족 통일의 길’만 아니고 탈북자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최종 정착지도 남한 사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국경을 넘는 ‘탈북’의 길을 주로 한인교회와 인권단체들이 인도했듯이 이들의 ‘탈남’도 역시 이들이 인도하기 시작했다. 북한 이주민들이 남한을 넘어서 제3국으로 가기 시작한 최초의 계기는 주로 해외 한인교회에서의 간증활동이나 탈북인권과 관련된 국제회의나 청문회 등의 증언을 위해서였다. 특히 남한의 진보정권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고 여긴 국제적 인권단체들은 미국에서 「북한인권법」

52) 박명규 외,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53) 해외체류 탈북자 현황 인터뷰(2013.8.29).

이 채택되자 바로 태국 등 제3국에서 난민자격을 얻고자 대기 중인 탈북자들부터 남한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여론 압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을 염려하는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탈북자들의 난민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그들의 미국 입국은 잘 실현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 보수정권과 남한의 진보정권간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클 때 이미 미국에 체류하며 국회 청문회나 한인교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이 남한 진보정권의 정치적 탄압과 신변 위협을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하였다. 그들 중 일부가 정치적 망명에 성공하자 이후 남한 국적 탈북자들이 일단 미국 현지로 가서 직접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거나, 스스로 대한민국 여권을 버리고 북한을 탈출해서 바로 현지까지 밀입국해서 온 난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체류자격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주방식은 뒤이어 시작된 독일과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으로의 탈북자 이주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되었다.

미국 등 이른바 인권선진국으로 이주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서 기본적인 거주 및 취업자격을 획득하고, 일정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았지만, 그 내용은 냉전 정치의 틀 안에서 특별하게 진화한 남한의 ‘탈북’ 이주민 정착지원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기본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주로 현지 한인교회와 한인 커뮤니티의 후원으로 필요한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를 얻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는 한국 전쟁 시기에 남한으로 피난 왔다가 재이주한 북한 출신 실향민들이 많아서 이들의 초기 정착의 친족적·사회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해외 한인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자영업을 하는 성공한 중산층 이주민들도 많아서 북한 이주민 자신들도 이곳으로 재이주를 ‘생각할 수 있고,

해볼 만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북한에서의 탈출과 남한으로의 이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탈남' 재이주도 초국가적인 한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 주로 의존한 것이었다. 이렇게 '탈남'한 사람들의 다면적 '경계 넘기' 경험과 정보는 바로 남한 내부의 탈북자 커뮤니티로 연결되어 다양한 국가에 걸친 '초국가적 연결망(transnational network)'을 형성하게 되었다.

2) 초국적 전략과 '유연한 시민권'

“당신(남한 사람)들도 기회가 있으면, 미국에 안 오겠어요?” 미국 LA에서 야간에 빌딩청소를 하고 있는 한 북한 이주민에게 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미국에 와서 사느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이었다. 남한 사회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주로 영어와 외래 문화 때문에 언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의 대답은 탈북 이주민들의 '탈남' 이주의 문화적 논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다. 이들의 거주국 선택은 언어나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의 정착 지원금이나 취업훈련, 특례입학 등의 지원책이 모자라서 이들이 다른 나라로 재이주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들이 왜 남한을 떠나서 언어와 문화 차이가 더 큰 생소한 다른 나라를 또 다시 새로운 거주지로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웅이 제안한 '유연한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 개념이 유용하다.

‘유연한 시민권’이란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조건에 유동적, 기회주의적으로 대응하도록 사람들을 유인하는 자본 축적, 여행, 이주에 대한 문화적 논리를 뜻한다. 그들은 세계무대에서 사회적 위신이나 자본축적을 추구하면 시장, 정부, 문화체제와의 관계에서 유연하고, 이동성 있고, 위치를 바꾸어가는 행동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논리나 행위는 가족, 성, 국적, 계급이동, 사회 권력에 관한 특정한 의미구조 안에서 만들어진다.⁵⁴⁾

옹(Ong)은 홍콩 출신 화교집단이 다양한 국가에서 시민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획득하여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주거, 일감, 자본을 옮겨가며 살아가는 ‘초국적 전략(transnational strategies)’에 주목하여 ‘유연한 시민권’ 개념을 발전시켰다. 중국과의 통합을 앞두고 홍콩의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연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초국적 전략이 특히 집중적으로 폭넓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전쟁 이후 분단체제 속에서 안보위기를 주기적으로 겪었던 남한의 중산층, 중에서도 특히 전쟁과 이산의 ‘심리적 상처(trauma)’를 경험한 북한 출신 실향민 출신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 등으로의 이주를 통한 ‘유연한 시민권’ 획득을 추구하였다.

최근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된 남한 중산층의 초국적 전략은 특히 글로벌 상징 자본을 축적하는 부문에 집중되었다. 영어라는 상징 자본과 해외 명문대학 학위 취득과 같은 문화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들은 원정출산과 조기유학, 기러기 가족과 같이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가족 가치관과 규범에도 어긋나는 초국적 전략을 대규모로 실행하

54) Aihwa Ong, *Flexible citizenship*, p. 6.

였다. 남한 사회의 ‘위계적 국가성’ 개념이 특히 영어권 선진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에 특별한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가적 위계 개념상 상대적으로 아래에 위치한 북한이란 국가 출신으로서 남한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낮아진 사회적 지위를 경험한 북한 이주민에게 선진국으로의 이주와 그곳 시민권의 획득은 나름대로 효과적인 초국적 계급상승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도에 남한 학교를 떠난 탈북 아동 청소년 중에서 외국으로 재이주한 학생의 비율은 43%에 달했다.⁵⁵⁾ 그 이유는 남한 학교에 대한 부적응 때문만이 아니라, 남한 사회 자체의 ‘위계적 국가성’ 개념 같은 문화적 요인도 관계가 있다. 즉 입시 중심의 경쟁적 학교제도에 더하여 북한이란 빈곤한 적성국가에 대한 이념적 편견도 북한 출신 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에 근본적 장애 요인인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수는 남한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더 잘사는 나라로의 또 한 번의 ‘경계 넘기’를 시도함으로써 해법을 찾고자 한다. 적어도 그들 나라에서는 냉전적 대립으로 인한 공포와 차별을 덜 겪으리라는 기대도 그들이 재이주를 하는 주된 동인 중 하나이다.

남한 중산층들의 상징 자본 획득을 위한 초국적 전략에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자본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그러한 경제력이나 인간관계가 없는 북한 이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은 바로 지구 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을 ‘넘어’ 옴으로써 그들이 획득한 ‘초국적 자본’이다. 그들의 ‘경계 넘기’가 자본화 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 행위에 대한 냉전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충족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특히 국제적 인권체

55) 『한겨레』, 2013년 5월 5일.

제의 문화적 논리나 서구의 여러 정부나 보수적 정치단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그들의 그런 초국적 자본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을 조성하였을 때 그러한 정보나 기회에 먼저 접근한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선진국 재이주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 이주민들의 ‘탈남’ 현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적인 남한이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 논리에 대응한 초국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한 중산층의 초국적 계급상승 전략을 간파하여 모방한 것이기도 하고, 남한 사회의 사회복지체제에 의존해서 살아 가게 된 최하층 소수자 집단의 사회적 운명을 간파한 초국적 생활 전략이기도 하다. 요즘은 상징 자본 축적 가능성이 높은 미국 사회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 수준도 ‘탈남’ 이주국 선택의 새로운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앞장에서 소개하였듯이 남한에서 10년 이상 살아도 취업, 사업, 학업에서 차별과 좌절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저소득층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특별한’ 생활보호 대상으로 살고 있는 처지에 영국이나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등 사회복지 선진국의 더 나은 ‘보편적’ 복지체제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 그쪽에 끌리게 되는 것이다.

남한보다는 덜 차별적이고 덜 경쟁적인 노동환경과 생활문화, 더욱 잘 제도화된 사회복지체제와 노후보장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른이나 아이나 저소득층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열된 교육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북한 이주민들이 ‘탈남’하도록 유인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바로 이런 점들은 신자유주의에 지친 남한 국민들 대다수가 꿈꾸어 보았을 내용이 아니냐고 LA의 탈북자는 되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의 ‘탈북’과 마찬가지로 ‘탈남’도 일

방통행의 편도 여행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인터넷과 전화, SNS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초국적 자본’의 창출과 확장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⁵⁶⁾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보다 안정된 체류자격을 갖추게 된 사람들은 다른 남한의 ‘초국가적 행위자(transnational actors)’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국을 오가며 선진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민의료 등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선진국의 시민권과 영어 등 외국어 능력이란 ‘초국가적 상징 자본(transnational symbolic capital)’을 활용하여 초국가적 취업 및 사업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3) 냉전 정치를 넘어서

“남한에서와 달리, 이곳에서 우리는 그냥 보통사람이에요. 더 이상 탈북자가 아니고 다른 남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냥 아시아 사람일 뿐이죠.”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한 탈북자가 한 말이다. 지금도 남한에서 자주 언급되는 10여 년 전 중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기획망명 사건의 대표적 영웅 중 한 명이었던 그가 행복한 얼굴로 한 말이다. 그와 비슷한 말을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북한 이주민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지금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남한 사회의 냉전 정치의 틀 안에서

56) 이희영,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거나, ‘모자란 사람’으로 차별받거나, ‘이산한 사람’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어온 이들에게 그 냉전의 굴레를 벗은 정체성의 느낌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냉전적 갈등의 현장을 벗어나서 보면, 남과 북의 대립구도 속에서 가족의 안위를 늘 걱정하며 살던 강박적 현실로 부터도 조금씩 거리를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 북한으로의 송금까지 훨씬 수월해진 곳에서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송금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이 덜 경계하는 국가에 거주할수록 가족 보복의 위협을 덜 느끼게 되고, 언젠가는 해외동포로서 북한으로 가족방문도 가능할 것이라는 꿈까지 꾸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냉전적 이념으로 이들을 영웅시 하는 남한과 미국은 냉전 상황에 대한 이들의 악몽을 되살린다는 점에서도 살기 어려운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냉전 정치의 틀을 넘나드는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주의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그들이 국경을 넘어서 획득한 ‘초국적 자본’이 주로 냉전 정치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주로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중 일부는 남북한 사회에서 유용한 상징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존의 냉전적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춘 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중 몇몇은 북한체제의 희생자이자 살아 있는 증인으로서 남한과 국제적 언론매체에 출연하는 등 공개적 활동을 하여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에 따르는 사회문화적 자본을 축적하기도 하였다.⁵⁷⁾

그린과 엡스타인(Green and Eptein)은 탈북 여성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이러한 형식의 미

57) 신난희,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경험 연구: 탈북여성의 적응 전략과 행위성을 중심으로”(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디어 출연은 자신들의 소리를 직접 전하기도 하지만, 자주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기존의 지식체제를 강화한다”고 하였다.⁵⁸⁾ 북한 이주민들 중 일부는 이런 미디어 출연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한의 위계적인 ‘타자화(Othering)’에 맞추어 자신들의 집단 이미지를 ‘파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⁵⁹⁾ 실제로 그러한 행위는 북한 이주민들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활동의 위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초국적 가족의 절박한 안전 문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침투성 초국가주의와 변화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은 여러 국가의 냉전 정치체제를 관통하면서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엄중하게 관리되는 조·중 국경을 넘나드는 지속적인 연결망과 반복적인 교환을 통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적성 지역 주민과 허가받지 않은 교신을 하고 돈과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남한의 냉전 정치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냉전적 고정관념과 국제적 인권체제의 도움을 자원화하여 정치적 난민으로서 서구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국경을 넘나드는 북한 이주민 집단은 여전히 지역, 성,

58) Christopher K. Green and Stephen J. Epstein, “Now on My Way to Meet Who? South Korean Television,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Dilemmas of Representation,” *The Asia-Pacific Journal*, Vol. 11, No. 2(2013).

59) *ibid.*, pp. 26~27.

계급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들이 구사하는 침투성 초국가 전략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소규모이다. 따라서 냉전적 담론이 오래전부터 예상해왔던 북한 정치체제 붕괴나, 정권교체를 유도할 만한 정치적 반대 세력의 임계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⁶⁰⁾ 그러나 사람, 정보, 물자 이동의 절대적 통제를 바탕으로 기능하는 북한의 상징정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초국가주의의 변혁성은 국경을 넘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양편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어주는 연결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제된 국경을 넘나드는 침투성 초국가 전략의 사회 변혁 잠재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⁶¹⁾

최근 북한 정권은 외부 세계와의 철저한 단절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중동까지 대규모의 노동력을 해외로 송출하고, 중국과의 변경 지역에 대규모의 공단을 조성하는 등 제도적으로 통제 가능한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이미 무수하게 뚫린 많은 구멍과 라인을 통해서 빈번하게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가 초래한 변화된 현실에 대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국제적 노동 분업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북한 정권은 새로운 초국가주의적 현실 상황 속에서 유일사상체제의 상징정치를 통해 강조해왔던 ‘조선(한)민족’이란 ‘민족성(ethnicity)’보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민성(nationality)’을 강조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체성의 정치’를 전개하여 인

60) Kyung-Ae Park, “People’s Exit in North Korea: New Threat to Regime Stability?” *Pacific Focus*, Vol. 25, No. 2(2010), pp. 257~275.

61) 초국가주의의 변혁성에 대한 논의는 Steven Vertovec, *Transnationalism*, pp. 21~24 참조.

민들을 결속시키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 사람으로서 남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차별받는 상황과 경험담을 공개적으로 거듭 보도하면서 북한이라는 국가에 속한 개인들의 가치상승과 국가의 경제발전이란 공동과제를 결합시켜 나가는 ‘발전주의국가’ 개념을 주입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남한 사회에서도 북한 이주민들은 전후 60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분단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침투성 초국가 전략을 다차원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대규모의 대북송금과 무단교신, 연쇄 이주, 재입북과 재탈북 등 비교적 은밀하게 진행되던 불법적인 초국적 활동에 이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재입북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게 되었다.

손정훈은 북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1998년 탈출하였다. …… 그러나 서울에서 불행한 10여 년을 지낸 후, 최근 말기암 진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남한 정부가 이 49세 활동가의 해외여행을 금지시키기 위해 과거 권위주의 시절부터 논란이 많았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그의 행동을 막았다. 손정훈은 “내가 가고 싶은 주된 이유는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그러나 그가 조국(북한)에서의 가혹한 처벌을 감수하고 (돌아)가고자 한다고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은 탈북자에 대한 남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저항하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하였다. …… 손정훈은 그의 기본적 권리이자 서울의 인권 활동가들이 지원하는 권리이기도 한 자유이동권을 남한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⁶²⁾

62) *Financial Times*, August 21, 2013.

이동의 자유와 가족 재결합은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인권이지만
분단체제의 냉전 정치는 그것을 일관되게 무시해왔다. 양쪽 모두 주로
상대방에 그 책임을 전가해 오다가 가끔 상호 이해가 일치하면 가족
상봉과 정치범 송환 등을 정치적 이벤트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손정훈
이 해외언론을 통해 명백하게 표현하였듯이, 그가 자신의 의도를 공개
적으로 천명한 것은 그러한 분단체제의 냉전 정치에 대한 저항적 행
동이다. 그것은 남한과 북한, 두 나라 모두의 냉전 정치의 모순과 국제
적 인권체제의 문화적 논리를 간파하고 관통하고자 하는 전략적 움직
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그의 공개발언은 남한 정부에 대한 비판
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한부 인생의 절박한 ‘침투성 초국가 전략’이자, 동시에 분단체
제의 헤게모니 권력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단체제의 두개의 국민국가는 각각 냉전적 이념체제로
통합시킨 개인, 가족, 국가, 민족을 상징해왔다. 그러나 분단체제를 유
지시켜 온 정치적 장벽을 뚫고 진행된 초국적 이주로 인해서 그 사회
적 단위들 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관계가 교란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초국가주의 시대인 오늘날 분단체제의 두 국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냉전의 정치’가 아니라 ‘초국적 이동’인 것
이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3월 24일 / 채택: 3월 31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 강주원,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서울: 글항아리, 2013).
- 권현익,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서울: 민음사, 2013).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나』(서울: 창비, 2012).
- 박명규·김병로·김수암·송영훈·양운철,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1).
- 신현준, 『귀환 혹은 순환: 아주 특별하고 불평등한 동포들』(서울: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3).
- 정병호·송도영, 『한국의 다문화 공간』(서울: 현암사, 2011).
- 정병호·전우택·정진경,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 푸코, 미셸(Michel Foucault), 『감시와 처벌』(서울: 나남출판, 2003).

2) 논문

- 김현미, “중국 조선족의 영국 이주 경험: 한인타운 거주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41권 2호(2008).
- 송영훈,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제주: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2012).
- 신난희,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경험 연구: 탈북여성의 적응 전략과 행위성을 중심으로”(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오원환, “탈북 청소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희영,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2013).
- _____,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2권 1호(2012).

정병호,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 서울 양천구의 탈북 이주민 거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2년도 학술대회 자료집』(한국문화인류학회, 2012).
_____, “탈북 이주민의 환상과 부작용: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2003).

3) 신문

『국민일보』, 2012년 7월 12일.

『매일일보』, 2013년 8월 22일.

『문화일보』, 2007년 7월 6일.

『시사저널』, 2013년 10월 17일.

『연합뉴스』, 2012년 9월 16일.

『프레시안』, 2013년 4월 25일.

『한겨레』, 2013년 5월 5일.

4) 기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북한인권자료센터,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6: 취업, 실업, 소득 6』(서울: 북한인권자료센터, 2011).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새터민(탈북자) 의식조사-조사결과 요약 및 통계표』(서울: (사)새조위, 2010).

2. 국외 자료

1) 단행본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NY: Routledge, 2011).

Charney, Joel, *Act of Betrayal: The Challenge of Protecting North Koreans in China* (Washington DC: Refugees International, 2005).

Faist, Thomas and E. Özveren(Eds.), *Transnational social spaces: agents, networks and institutions*(Ashgate Publishing Co., 2004).

- Meinhof, Ulrike Hanna and Anna Triandafyllidou, “Beyond the Diaspora: Transnational Practices as Transnational Capital,” in Ulrike Hanna Meinhof and Anna Triandafyllidou(eds.), *Transcultural Europe*(NY: Palgrave Macmillan, 2006).
- Ong, Aihwa,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Duke University Press, 1999).
- Smith, Michael Peter and Luis Eduardo Guarnizo, *Transnationalism from Below*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98).
- Vertovec, Steven, *Transnationalism*(New York: Routledge, 2009).

2) 논문

- Chang, Kyung-Sup, “Introduction: South Korea’s Condensed Transition from Class Politics to Citizenship Politics,” *Citizenship Studies*, Vol. 16, No. 1(2012).
- Chung, Byung-Ho, “Between Defector and Migrant: Identities and Strategies of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Korean Studies* Vol. 32, No. 1(2009).
- _____, “Living Dangerously in Two Worlds: The Risks and Tactic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in China,” *Korea Journal*, Vol. 43, No. 3(2003).
- Goedde, Patricia, “Determining Refugee Status for North Korean Escapees und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1, No. 2(2011).
- Green, Christopher K. and Stephen J. Epstein, “Now on My Way to Meet Who? South Korean Television,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Dilemmas of Representation,” *The Asia-Pacific Journal*, Vol. 11, No. 2(2013).
- Jang, Soo-Hyun, “Living as Illegal Border-Crossers: Social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Korea Journal*, Vol. 43, No. 3(2003).
- Kwak, Sun-Young and Yong Wook Lee, “Using Norms Strategically: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Opera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sian Perspective*, Vol. 33, No. 1(2009).
- Lankov, Andrei and In-Ok Kwak, “The Decline of the North Korean Surveillance State,” *North Korean Review*, Vol. 7, No. 2(2011).
- Lankov, Andrei, In-Ok Kwak, and Choong-Bin Cho, “The Organizational Life:

- Daily Surveillance and Daily Resistance in North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2(2012).
- Lee, Chul Woo, “South Korea: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and the State-Nation Nexu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40, No. 2(2010).
- Lee, Woo-young and Yuri Kim, “North Korean Migrants: A Human Security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 Vol. 35(2010).
- Ong, Aihwa,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Making: Immigrants Negotiate Racial and Cultural Boundaries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Anthropology*, Vol. 37, No. 5(1996).
- Park, Hyun Ok, “Democracy, History, and Migrant Labor in South Korea: Korean Chinese, North Koreans, and Guest Workers,” *Korean Studies Program, Shorenstein APARC*(Stanford University, 2005).
- Park, Kyung-Ae, “People’s Exit in North Korea: New Threat to Regime Stability?” *Pacific Focus*, Vol. 25, No. 2(2010).
-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Vol. 9, No. 2(2009).
- Song, Jiyoung, “Smuggled Refugees: The Social Construction of North Korean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Vol. 51, No. 4(2013).
- Yoon, In-Jin, “Circumstantial Citizens: North Korean ‘Migrants’ in South Korea,”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NY: Routledge, 2011).
- _____, “North Korean Diaspora: North Korean Defectors Abroad and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Vol. 30, No. 1(2001).

3) 신문

Financial Times, August 21, 2013.

Newsweek, Mar. 5, 2001.

Wall Street Journal, Aug. 28, 2003.

White House, April 28, 2006.

Cold War Politics and Penetrant Transnational Strategies of North Korean Migrants

Chung, Byungho(Hanyang University)

North Korean migrants' identities have been in a constant state of evolution in the face of cold war politics. In South Korea, while they are given prominence as either heroes or victims of the Cold War, they are often the object of either pity or wariness as political defectors or economic refugees. The government provides them with special resettlement and social welfare support, but in fear of discrimination, they try to pass as South Koreans. Due to their unique political characteristics, they actively engage in the shadow transnational movements of people, goods and information across borders. Illegal money transfers and secret chain migration through transnational networks have become routine affairs. These acts of border-crossing are interpreted here as "penetrant transnational strategies," actions which penetrate not only the political

barriers of the two divided nation-states but also the international borders beyond South Korea. This paper investigates how North Korean migrants, as actors and subjects, not as heroes or victims, are creating invisible transnational spaces through these strategies and identity politics. It also examines how their penetrant transnationalism continues to challenge the existing order of the current status quo of a divided Korean peninsula, and in so doing, transforms both countries themselves.

Keywords: transnationalism, penetrant transnationalism, transnational strategies, North Korean refugee, defector, migrant, human rights, cold war politics.